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재요청	
	2024년 10월 10일(목)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최명선 010-9067-964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아리셀 참사 110일 !!

박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기자회견

2024년10월11일(금) 오전9시 / 국회 소통관

1. 개요

- 일시 : 2024년10월11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의원, 아리셀 산재피해가족협의회, 아리셀 중
대재해참사 대책위원회

2. 취지

- 이주노동자 최대의 집단 산재참사로 아리셀에서 23명의 노동자가 사망 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을 훌쩍 넘겨 110일이 되었으나,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박순관 대표이사를 국정감사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23명의 죽음에도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국회를 규탄하며, 박순관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즉각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 박순관은 에스코넥, 아리셀 두 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실상 에스코넥의
한 부서처럼 아리셀을 운영해 왔습니다, 아리셀과 에스코넥 모두 불법파견이 드러
나고 있으며, 군납 배터리 비리 조작이 밝혀져 구속영장이 10월10일 오늘 다시 청
구되었습니다. 박순관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피
해자 유족들에게 진정한 사과는커녕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소기업 아리셀은 정리 수순에 들어가고, 모기업 에스코넥의 대표직은 사임하면서
꼬리 자르기, 배째라로 버티고 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110일 동안 장례도 치르
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농성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박

순관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 기자회견을 적극 취재 보도 요청드립니다.

3. 진행순서

- 기자회견 취지 및 증인채택 요구 발언 : 진보당 정혜경 의원
- 정치적 계산으로 아리셀 참사 외면 국회 규탄 :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
- 박순관 대표이사 국감 증인 채택 요구 : 고 엄정정님 유족 이순희 (피해가족 협의회 공동대표)
- 박순관 대표이사 국감 증인 채택 요구 : 아리셀 피해가족 협의회 공동대표 김태운
- 에스코넥, 아리셀의 불법 비리 및 국감 증인 채택 요구 : 아리셀 대책위 법률지원단 신하나 변호사
- 아리셀 참사 문제해결 국감증인 채택 요구 : 대책위 공동대표 양환웅 조계종 노동위원회

[붙임] 기자회견문

**이주노동자 최대의 집단 산재 사망 !!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1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박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모기업 에스코넥, 아리셀의 온갖 불법 비리가 줄줄이 밝혀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이어 에스코넥과 아리셀의 불법과건이 드러났고, 어제는 군납 배터리 조작 비리가 밝혀 다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그러나, 22대 국회 환노위는 돈벌이에 눈이 멀어 23명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았다. 오늘로 참사 발생 110을 맞았으나, 피해자 유족들은 아직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에스코넥 본 사 앞에서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더욱이 증인 채택 불발이 여당이 민주당 소속 화성시장을 부르겠다고 하여 불발되었다고 한다. 23명의 죽음에도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는 22대 국회 환노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아리셀 박순관 대표이사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23명의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업, 23명의 집단 중대재해 참사 발생에도 불법과건, 위협의 이주화 대책은 나 몰라라 하는 정부에 이어 국회까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를 외면하는가? 더욱이 박순관 대표이사는 구속 기소가 된 이후에도 피해자 유족들의 교섭 요구는 거부하고, 배째라 식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아리셀과 한 몸인 에스코넥의 책임을 회피 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 매년 100명 가까운 이주 노동자가 일하다 죽어 나간다고 진상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재발방지 대책도 없이 방치하던 정부와 파렴치한 기업을 국회도 방치하겠다는 것인가?

아리셀 대표이사 박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박순관은 에스코넥, 아리셀 두 개 회사의 대표이사로 있으면서, 사실상 에스코넥의 한 부서처럼 아리셀을 운영해 왔다. 쪼개기 경영으로 회사를 분리한 박순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아리셀은 정리 수순으로, 에스코넥은 대표이사직 사임으로 꼬리 자르기를 하고 있다. 몇 달만 버티면 김앤장 로펌이 박순관을 처벌에서 빼 내오고, 삼성전자 납품으로 팽팽 돌아가는 에스코넥을 살려 다시 또 회생할 것이다. 피해자 유족들의 피눈물 나는 투쟁에도 제2, 제3의 아리셀은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아리셀 참사 이후 노동부는 참사의 근본 원인인 만연한 불법과건, 위협의 이주화, 화학폭발사고 대책은 커녕 이주노동자 산재 예방 전담 부서 설치조차도 없다. 국회가 증인 채택도 없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정부는 아리셀 참사 대책의 흔적조차 지울 것이다.

참사 110일이 지난 오늘도 피해자 유족들은 에스코넥 본사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국회마저 이 참사를 외면한다면 기업의 배째라식 경영을 국회 또한 방치했다는 지탄을 받게 될

것이며, 이주노동자 최대의 집단 산재 참사의 진상규명. 기업의 책임, 정부 대책은 단 한치의 진전도 없이 제2, 제3의 아리셀 참사가 이어질 것이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명 아리셀 참사의 주범 박순관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즉각 채택하라

2024년10월11일

아리셀 산재피해가족 협의회,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